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021~2025]

2020.12.



환경부

목 차

I. 종합계획 개요	1
1. 수립 개요	2
2. 계획의 성격	3
3. 수립 경과	4
II.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5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7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9
3. 사회환경교육 강화	10
4. 인력양성 및 지원 확대	11
III. 환경교육 추진 여건 및 향후 방향	12
1. 국내·외 동향	13
2. 환경교육 정책 수요	15
IV. 제3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6
1. 정책 방향의 변화	17
2.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및 목표	18
V. 추진 과제	20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21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31
3. 사회환경교육 강화	43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50
VI. 자원 조달방안 및 추진 주체	58
1. 자원 조달방안	59
2. 추진 주체	60

I

종합계획 개요

1. 수립 개요
2. 계획의 성격
3. 수립 경과

I. 종합계획 개요

1. 수립 개요

□ (법적 근거)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개요

- (계획 기간) 2021년~2025년, 5개년
- (수립 절차)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추진 체계)

환경부	· 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진흥위원회	· 종합계획(안) 심의 ·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과제별 주관기관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체 추진실적 점검
환경부	· 기관별 추진실적 종합 ·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 계획의 수정·보완

2. 계획의 성격

-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 계획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비법정 계획인 “환경교육발전계획” 수립(‘06)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으로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 제2차 계획기간(‘16~’20)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계획(‘21~’25) 수립
-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 추진과제 제시
 -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제시
 - 모든 시민의 환경인식 개선 및 사회적 실천과 연계한 환경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학습권 보장의 기반 마련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방향 제시
 - 모든 학생과 시민을 위한 포용적 환경교육
 - 부처 간 협력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융합형 환경교육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 협력·관리·정비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

3. 수립 경과



II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강화
4. 인력양성 및 지원 확대

II.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 및 한계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16~'20)

비전	'배려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
목표	-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기회 확대

분야	성과	한계
환경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조직 및 제도 강화 · 국가환경교육센터 역할 제고 · 지역센터 확대 및 운영체계 정비 ·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역센터 역할 명료화 부족 · 지역센터 관리 및 지원 미비 · 중장기 콘텐츠 개발 계획 부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연계 환경교육 추진 기반 마련 · 환경교육 우수시행학교 지원 · 유아 환경교육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환경교육 지원 자원 부족 ·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미흡
사회 환경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확대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점검 미흡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대 미흡
인력양성 및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환경교육 연수 부족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사후관리 미흡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추진성과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강화

- 환경부 환경교육 전담조직 설치('18, 환경교육팀)
-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제도 도입 및 기존제도 보완('20)
 - ※ (주요 개정내용) 환경교육 우수학교, 사회환경교육기관·환경교육도시 지정제 도입,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 및 역할 정비 등

□ 국가환경교육센터 역할 제고

- 제3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19.5~'21.5, 환경보전협회)
-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 간 소통·협력
 - ※ 국가-광역환경교육센터 간담회('19.9, '20.11)

□ 지역환경교육센터 확대 및 운영체계 정비

-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 ※ '16년 (광역) 8개소, (기초) 10개 → '20년 (광역) 17개소, (기초) 25개소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예산 확대
 - ※ '15년 2억원 → '18년 6억원 → '19년 9억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마련('19.11)

□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환경교육도시 시범 지정('20.9)
 - ※ '20년 지정 환경교육도시 : (광역) 충남, 부산 (기초) 수원, 성남
-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방안 마련('20)
 - ※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가이드라인' 공유('20)

□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지원 강화

- 중앙·지방정부-교육청-민간단체 공동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 ※ 기존 민간단체 중심의 행사를 '18년부터 환경부와 유관기관이 공동주최
- 종교단체, 군부대 등 다양한 주체와 MOU 체결 등 협력 강화
 - ※ 환경부-종교단체 협약('19.9), 국가센터-육군군수학교 협약('19.9), 유아방송 채널 협약('20.5)
-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소통·협업 강화
 - ※ 교육부 공동 환경방학 사업('18~'20), 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비상선언 지원('20), 환경교사 임용협의 및 결과도출('21, 5개 교육청 7명 선발 예정) 등
- 교육수혜자 맞춤형 환경교육 지원사업 운영
 - ※ 종교인대상 환경교육 지원('19~'20, 20개 기관에 22개 프로그램), 주부대상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16~'20, 50개)

한계점

□ 환경교육센터 위계별 역할 명료화 부족

-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추진체계 확립 및 환경교육센터 역할의 구체화 필요

□ 지역환경교육센터 관리 및 예산지원 미비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및 이행평가 체계 마련 필요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미흡
 - ※ '20년 현재 6개소에만 9억원(센터당 1.5억원) 지원 중

□ 콘텐츠 개발관련 중장기 계획 부재

- 시대 흐름에 맞춘 생애주기별, 주제별 등 중장기 수준의 콘텐츠 개발 계획 마련 필요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성과

- 학교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추진기반 마련
 -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교재 개발
 - ※ 차기 국가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전략 및 자료개발 연구 등('16~'20)
 - 환경현안을 반영한 융합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17~'19, 코딩 4종, VR 2종, AR 1종)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원 사업 추진
 - 환경과목 선택학교 대상 꿈꾸는 환경학교('17~'20, 총 26개교) 및 환경 동아리('17~'20, 총 427개교) 지원
- 유아 환경교육사업 운영
 - 유아환경교육관 운영('17~, 수도권, 충남권, 충북권)
 - ※ 교육실적 : '17년 42,591명, '18년 42,926명, '19년 57,664명
 - 유아교육 콘텐츠 보급('16~'20, 총 2,775개) 및 교사연수('16~'20, 총 4,728명)

한계점

- 유아 환경교육 지원 자원 부족
 - 유아환경교육관 3개소를 운영 중이나, 예산 및 시설 등 지원 확대 필요
 - 교육관이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국 규모의 지원에는 역부족
-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 미흡
 - 초·중등 사업 대비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족
 -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환경교육 연계 강화 필요

3. 사회환경교육 강화

추진성과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확대

- 온·오프라인 상시 컨설팅으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확대 ('16년, 총 461건 → '20년, 총 805건)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환경장관회의(TEMM) 청년포럼 개최 및 참석

※ TEEN18 및 TEMM19 청년포럼 개최('17), TEEN21 개최('20) 등

한계점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사후관리 미흡

- 지정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통해 해당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
- 효율적인 홍보 전략 수립으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 필요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대 부족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관련 전문가들 뿐 아니라 지역 간, 분야 간 등 네트워크의 영역 확대 필요

4. 인력양성 및 지원 확대

추진성과

□ 교원 대상 환경교육 역량 강화

-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교원 대상 직무연수 운영('16~'20, 1,471명)
-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의 '정의 및 역량 요소' 부문에 '사회 및 환경변화 대응' 추가('19)
- 교원 연수과정 환경교육 지원자료 개발('19)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운영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운영('16년 2개소 → '20년 10개소, 총 1,130여명 배출) 및 운영관리시스템* 구축('16)
 - * 제도소개, 양성과정 모집 및 선정, 이력관리, 인력풀 소개, 이력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환경교육포털 내 탑재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 교재 개발('15~)
 - ※ 3급 공통교재 개발('15), 1·2급 해설서 개발('17), 활용방안 연구('18)

한계점

□ 교원 대상 환경교육 연수 기회 부족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초·중등 맞춤형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연수 기회 확대 필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사후관리 미흡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자격정지 등 국가 자격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 부재

III

환경교육 추진 여건 및 향후 방향

1. 국내·외 동향
2. 환경교육 정책 수요

Ⅲ. 환경교육 추진 여건 및 향후 방향

1. 국내·외 동향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극복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강화

- (국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후교육 의무화 등 환경교육 강화
 - ※ (대만) 공무원·학생 연 4시간 환경교육, (이탈리아) 기후변화교육 주 33시간 의무화 발표('19), (영국 일부 주) 모든 학교에 기후교육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
- (국내) 기후위기 인식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기후교육 의무화 등 목소리 증가
 - ※ 환경교육도시 자체 선언('19, 부산, 충남 등), 학교환경교육비상선언('20, 시도 교육감협의회), 생태전환도시 추진('19, 서울교육청) 등

□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강화

- (국외) 환경교육법의 이행 및 재정 지원 사항 명시*, 환경교육 시행을 위한 기관 설치**
 - * (대만) 환경교육법의 강력한 이행 및 재정 지원 명시, (미국) 환경교육기금 규정 및 관련법 의거 예산의 10%를 국가환경교육재단(NEEF)에 지원
 - ** (대만) 지역 환경교육센터, (미국) 국가환경교육재단
- (국내) 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은 별도 기금 없이 당해 연도마다 사업예산 편성, 환경교육센터 등 운영

□ 융합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 (국외) 학교환경교육 정책·가이드라인을 갖추고 통합적으로 시행
 - ※ (일본·중국·대만·미국·캐나다·호주·영국) 교육과정 상 통합 시행
 - (대만·스코틀랜드)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학교 내 환경교육 의무화

- (국내) 유·초등은 분산형 접근을, 중등은 분산형 접근과 독립형 접근을 동시 채택하며,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포함

※ (범교과 학습주제)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강화

- (국외) 환경교육 관련 법령(법, 지침)을 기반으로 환경교육 인력 및 프로그램 인증(대만, 일본)
- (국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등 시행

□ 환경교육 주체 간 협력체계 강화

- (국외) 관련 중앙 부처, 연방-주정부 및 재단·센터 등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미국, 일본 등)
- (국내) 관련 중앙 부처(환경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지역(지자체-교육청-민간단체) 협력, 환경교육센터(국가-광역-기초) 협력 체계 마련

2. 환경교육 정책 수요

- 환경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확산 및 역할 확대 필요
 - 국가-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의 위계별 기능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 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정책 이행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구축
- 국가 환경교육 전담기관 설치 필요
 -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육 정책연구, 이행, 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
- 환경교육 연구 강화 필요
 - 환경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 중장기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마련
 - 환경교육 연구 체계화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평가 기반 강화
- 융합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사회, 과학 등 타 교과와 연계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 강화 필요
 - 국가 환경교육 사업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활용을 적극 고려
 -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교육내용, 양성과정 운영의 보완 및 급수별 중장기 양성방안 마련
- 국제 환경교육 협력 강화 필요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협력분야 확장 추진
 - 환경협력국 간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인재양성 지원 방안 마련

IV

제3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 정책 방향의 변화
2.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및 목표

IV. 제3차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 정책 방향의 변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11~‘15)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16~‘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1~‘25)
환경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기반 마련 · 포털사이트 및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제도운영 내실화 · 사업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체계 고도화 · 계획의 이행체계 확보 · 환경·사회·기술변화 대응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유아, 대학생, 교원 환경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제도를 고려한 환경교육 · 교사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체계 내 접목을 강화한 환경교육 · 교육청·학교 환경교육 실행 지원 · 교원 연수 기회 확대
사회 환경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주부, 공무원 환경교육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정착 · 언론, 종교 등 대상 다변화 · 지역기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교육 기반 강화 · 인력 전문성 제고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시민 환경학습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 한·중·일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협력 · 학교, 교육청 협력 · 민·관 협력 · 개도국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환경부·지역협력 확대 · 학교·사회·민간협력 강화 · 한·중·일 네트워크 협력분야 확대

2. 제3차 종합계획의 추진체계 및 목표

□ 추진체계

비전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 ·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
-----------	---

영역	추진 과제
-----------	--------------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❷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제고 ❸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❹ 기후변화·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 ❺ 미래형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	-----------------------	--

2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 ❷ 시·도 단위별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❸ 학교급별 환경교육 실행 지원 제고 ❹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	---

3	사회 환경교육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 ❷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 ❸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보장
----------	---------------------------	--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환경교육 유관 기관 협업 강화 ❷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 ❸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
----------	-----------------------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과 시민의 환경학습을 위한 포용적 환경교육 · 부처 간 협력 및 학교-사회 협력을 통한 융합형 환경교육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 협력·관리·정비체계 구축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
-------------	---

□ 추진목표

영역	추진목표	'20년	'25년
환경교육 기반 구축	국가 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	-	설립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	이행
	환경학습계좌제 도입·운영	기초연구	운영
	환경교육도시 지정	4개	16개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
	미래형 디지털 환경학습 교재·교구 개발	VR,AR 3개	VR,AR 10개 마이크로콘텐츠 1,500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 환경교육 강화	-	추진
	에코스쿨 조성 시범사업	-	2개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	20개교
	환경교육 선도대학 지정	-	6개교
	학교관리자 연수 확대	420명	2,000명
사회 환경교육 강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	1,000개
	국가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1,130여명	2,200명
	자격취득·일자리 지원 연계 환경교육비 지원 수혜자 수	-	600명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수	850개	1,300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환경학습 모임 지원 수	-	60개
	범부처 환경교육 협력사업 발굴	1개	15개
환경교육 협력 확대	학교-사회 학습공동체 지원	-	15건
	한·중·일 네트워크 영역	1개	5개

V

추진 과제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강화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V. 추진 과제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1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현황 및 필요성

□ 국가 환경교육 전담기관 부재

-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중장기 정책 수립과 이행, 환경교육 조사 및 연구,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 필요

※ 현재 국가환경교육센터는 2년 단위로 지정·위탁하고 있어, 중·장기 정책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환경교육계획의 이행관리 체계 미비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 체계 필요

※ 현행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는 차기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은 미시행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집행 필요

- 환경부 내 실·국, 소속·산하기관이 분야별로 다양한 환경교육사업을 소관 예산으로 개별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예산 통합관리체계 부재

□ 환경학습 이력 관리 부재

- 개인의 환경교육 경험이 진학, 취업, 전문경력 인증 등으로 연결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학습의 이력 관리 요구

- 환경학습의 이력을 등록, 인증,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유사사례) 교육부의 평생학습계좌제

과제 추진 계획

□ 국가 환경교육 지원기관 기능 강화

- (단기) 국가 환경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 직접 교육사업을 지양하고 환경교육 정책 및 연구기능 확충*, 지역센터 협력·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기능 개선
 - * 환경교육연구 체계화 로드맵, 환경교육 평가도구 개발 등 연구실행기반 마련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내 해양환경교육 연구조직 신설('25, 해양수산부)
- (중장기) 기존 국가센터 지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환경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 추진
 - ※ (타부처 사례) 통일교육원(통일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여가부)
 - ※ (주요 역할) 국가 환경교육정책 조정 및 연구, 인재 양성, 지역센터 지원 등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21~)
- 제4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 종합평가결과 반영 등 환류('25)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 환경부(소속·산하기관 포함) 교육예산 확보현황 분석,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집행방안 등 마련('22)

□ 환경학습계좌제 도입·운영

- 개인의 환경교육 경험이 진학, 취업, 전문경력 인증 등으로 연결되도록 환경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환경학습계좌제' 도입('23~)
 - ※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와 연동하여 관리(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과도 연계)
 - 학교 동아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환경교육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평가·관리
 - ※ 추진일정 : 운영방안 마련('21), 법적기반 마련('22), 제도 운영('23)

현황 및 필요성

□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 미완성

- 지역(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광역 단위 환경교육센터 체계 구축 미흡(13개/17개)
 - ※ (광역센터) '16년 7개 시·도 8개 → '20년 13개 시·도 17개
 - (기초센터) '16년 3개 시·군·구 10개 → '20년 4개 시·군·구 25개
- 모든 광역지자체가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를 확대하여, 지역 환경교육 이행체계를 확립할 필요

□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 연계 미흡

- 국가-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위계별 역할 정립 및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효율성 부족
 - ※ 교육자료(프로그램, 교구, 교재) 개발, 연수 사업 등이 센터별로 독자 운영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점검 미흡

- 17개 광역지자체는 「환경교육진흥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년 단위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 국가 차원에서 지역환경교육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절차가 부재하므로 체계적 지표에 따른 이행평가 필요
 - ※ '19년에 이행지표가 개발되었으나, 평가는 미시행

□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 유도 장치 부족

- 지자체가 환경교육도시를 자체 선언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활성화 유도 장치는 부족
 - * (광역) 서울, 부산, 충남, 인천 (기초) 수원, 성남, 안산, 통영 등
-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제도와 추진 기반을 갖추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환경교육 모델 발굴 및 확산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및 기능 체계화

-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확대 및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 지자체별 환경교육센터를 1개소씩 지정하도록 독려 및 정비 추진
 - 센터 중심으로 지역 환경현안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확대
- 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간 사업계획서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위계별 기능 명료화 및 체계적인 교육사업 수행 지원

□ 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 연계 강화

- 각 환경교육센터의 위계별 기능 수행 및 협력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 국가-지역(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간 정기 교류회 개최, 연계사업 제안 및 공동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추진
 - 센터별 분산된 홈페이지를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 국가-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지원 체계 확보
 - 광역센터 예산지원 확대 및 기초센터 지원체계 구축('22~)

□ 지역환경교육계획 평가·환류 시행

- 광역지자체의 환경교육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사항 평가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결과를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연계
 - 지자체 워크숍을 통해 정책 교류 및 우수 사례 공유
- 지역환경교육의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환경교육정책 개선 및 차기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반영('22~)

□ 환경교육도시 지정 확대

-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여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유도('25년까지 16개 지정)
 - ※ 해양환경교육도시 지정('23, 해양수산부)
-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모니터링, 환류 및 우수 모델 발굴·확산('21~)

현황 및 필요성

□ 대국민 환경교육 정보의 통합적 제공 체계 미비

- 환경교육포털에서 환경교육 정책, 주요사업, 소식,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 강화 필요
 - ※ 현재 환경교육포털, 지역센터 홈페이지, TEEN 홈페이지 등이 별도 운영
- 국가와 지역의 환경교육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플랫폼 필요

□ 환경교육 현황 및 통계 신뢰성 부족

- 환경교육 현황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보다 체계화되고 신뢰성 높은 조사 결과 도출 필요
 - ※ 환경교육현황조사('16, '18)가 시행되었으나, 조사기준 및 결과가 불명확함

□ 국가 환경교육 백서 부재

- 국가 환경교육정책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조망하고 주요 환경정책수단을 소개하는 국가 환경교육 백서 발행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국 환경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환경교육 자원*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교수학습자료, 주변 교육시설, 현장체험장소 및 체험요령, 관련 동영상,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발굴·지원

* 교육시설(약 4,000개), 우수 프로그램(805개), 사회환경교육지도사(1,130여명) 등

- 교육부, 해양수산부,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교육시설·프로그램과도 연계 운영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용자의 편리성을 최적화한 시스템 마련
 - ※ 추진일정 : DB확보 및 표준화('21), 시스템 구축 착수('22), 관련 시스템 구축('23), 지역별 DB 통합운영('24), 시스템 완성('25)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교육콘텐츠 개발·운영('21), 환경교육 통합시스템과 연계('23)

□ 정기적인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통계 관리

- 환경교육의 분야별, 주제별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개발 및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23년 통계시스템 구축)
 - 국가-광역-기초환경교육센터 체계를 활용, 공동 사업으로 추진
 - 타 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분야의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
 - ※ (조사영역) 환경교육 기반(환경부, 지자체), 학교환경교육(교육부, 시·도 교육청), 사회 환경교육(지자체, 민간네트워크)

□ 환경교육백서 발간

-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정책 성과,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 이행 모니터링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백서 발간('25)
 - ※ (주요내용) 국가 환경교육정책 성과, 현황,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과 이행성과, 중장기 환경교육정책 방향, 우수 환경교육 사례 등
- 해양환경교육백서 발간('24, 해양수산부)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환경교육 강화 요구 증대
 -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선 청소년들의 결석시위*, 헌법소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학습권리 주장
 - * 기후위기대응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19)
 - **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20)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교육적 해결책 필요
 -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환경교육 확대 필요
 - ※ 국민환경의식조사('17, KEI) 결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수단은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의 확산'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 영역에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러한 요구의 충족과 함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대응 필요
 - ※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 채택('20.7)

과제 추진 계획

- 범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위해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청년 등으로 탄소중립 포럼 구성·운영
- 기후변화 특화 프로그램 강화
 -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교육대상 연령·직업별, 취약지역 특성별 다양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대응 기업 연계 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추진
 -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MOU 체결 등 협력을 통해 진로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발굴

□ 기후변화교육 집중 지원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변화 교육자료 개발·보급
 - 유·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교육자료(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 개발·보급*
 - * 교육부와 협의하여 창체과정(초등), 자유학년제(중등) 등 일선 학교에서 활용
 - ※ 사회·과학 등의 정규 교과목에 접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전반(원인·영향·완화·적응)과 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제작·보급
- 미래세대의 기후친화적 생활 실천 지원 모바일앱 운영
 - ※ 교육부와 협업하여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 모바일앱 「기후행동 1.5°C」(20.11월 출시)을 본격 운영(21년~), 성장기부터 온실가스 줄이기가 생활습관화 되도록 지원
 - * 초등학생(4~6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 제공, 실천수칙 안내·참여, 퀴즈, 인센티브 제공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원 기능 탑재
- 대학생 기후변화 활동 지원
 - 그린캠퍼스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대학생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
 - 대학생 대상 기후변화 정책 서포터즈 양성 및 활동(캠페인·홍보 등) 지원 등 청년들의 정책 참여 및 소통 기반 마련

현황 및 필요성

□ IT 기술 발달로 교육자료의 다양화 추세

-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로 학습자의 요구 충족 필요
 - 미세먼지, 기후변화 관련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로 학습자 흥미 유발 필요
 - 시민이 조사·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시민과학의 확산 흐름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등의 교육기법 도입 필요

□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대면 온라인 기반 교육 수요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교육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교육에서도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환경교육 수요 증가
 - 현재 학교에서 비대면 학습이 증가하는 추세로, 환경교육에서도 학생 자율환경학습 및 비대면 수업 지원 필요

□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학습 자료 부족

- 현재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에 따른 환경교육 주제, 방법, 범위가 체계화되지 못함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정책 수립 필요
- 평생학습기관(청소년, 복지시설, 도서관,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환경 주제의 프로그램 운영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교육 학습 지원 확대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미래형 디지털 환경학습 교재·교구 개발

- 학교급별, 주제별 활용 가능한 디지털 환경교과서 개발 및 보급
- 우수 생태복원지, 청정에너지 시설, 환경기초시설,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한 가상·증강현실(VR, AR) 콘텐츠 개발 제공
- 교과,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할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지원
 - * 짧은 분량의 영상 등을 통해 메시지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모바일 학습 가능 콘텐츠(유튜브, 카드뉴스 등)
- 찾아가는 환경 리빙랩(이동형 체험관) 운영
 - 시기에 맞는 환경현안을 주제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단기간 설치·운영이 가능한 리빙랩 개발 및 순회 교육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전시 기회 마련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를 전시, 교류, 공유하는 박람회 개최
 - ※ 추진일정 : 리빙랩 시범 운영('22), 리빙랩 확대 운영, VR·AR 콘텐츠 10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1,500개 개발(~'25)

□ 생애주기 맞춤 환경교육 프로그램 마련

-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현안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유아~노인까지 모든 연령대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유아기(7세이하), 아동기(8-13세), 청소년기(14-19세), 성인전기(20-34세), 성인중기(35-60세), 성인후기(61세이상)
- 평생학습기관* 등 유관기관에 개발한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주민편익시설 등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1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국가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반영 강화 필요

- 차기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주요 역량*' 및 교육과정의 중점 등에 '지구환경 생태계'를 범위에 포함 필요

* (주요역량)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사고, 심미적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환경과 생태적 감수성 반영

-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 증대

※ 고등학생이 원하는 환경 수업은 주당 2.2시간('19, 환경교육인식조사결과), 청소년들이 환경교육 필수화와 환경역량 강화 요청('19, 청소년기후행동)

□ 범교과 학습 및 교과 연계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

- 환경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기존 과목 및 주제의 포화로 환경교육 시행이 어려운 실정

※ 범교과 학습주제 중 법령에 근거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주제에는 안전교육, 성교육, 보건교육, 통일교육 등이 있음

- 환경교육은 그 특성상 다양한 주제들을 융합하고 연계 교과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

□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침체

- 현재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환경> 과목이 있으나, 선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07년 20.6%→'18년 8.4%)

- '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예정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조시 통합적 접근의 강화 전망

-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 ※ 2015 개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핵심 개념에 자연환경, 생활공간, 지속가능한 삶, 생물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환경 등 포함

□ 교원의 환경소양 함양 장치 부족

- 범교과 학습주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사들의 소양이 중요하나,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환경교육 미포함
 - ※ 교직과목 이수기준에 학교폭력예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은 있으나 환경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은 부재(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 환경교육 전공교사의 학교 진출 확대방안 필요

- 현재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률이 낮으며 선택학교도 무자격 교사(상치교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교사 신규임용률 저조
 - ※ '09년 이후 환경과목 선택학교 중 79%는 무자격교사(상치교사)가 운영하며, 전체 학교의 1.8%만이 자격을 가진 환경교사가 수업 운영
 - ※ '09년 ~ '20년까지 환경교사 신규임용은 없었으며, '21년 7명 임용 예정

과제 추진 계획

□ 초·중등 국가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 반영 요청

-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총론 및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에 '환경·지속가능발전'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
 - '추구하는 인간상'에 '환경·지구생태시스템의 보호와 존중'을 반영 요청
 - 과학, 사회, 도덕, 실과 등 관련 교과별 교육과정의 연계 단원에 환경교육 내용 반영 요청
- 차기 국가교육과정 기반 연계 교과의 교과서에 환경교육 내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출판사 및 저자에 최신의 환경교육 정보 제공(23)

□ 초·중등 SDGs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 (단기)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실제 SDGs 관련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지원
- (중장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주제별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을 묶어 SDGs교육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

* 안전교육, 성교육, 보건교육, 통일교육 등

- SDGs의 틀 안에 기후위기, 생물문화다양성, 원헬스(One Health)*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도록 설계

*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전체의 건강을 위해 전 세계, 국가, 지역과 여러 분야가 공동 노력을 하는 것

※ 추진일정 : SDGs교육 설계 연구('22), 자료 개발('23)

□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반영 권고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환경교육 반영 권고, 컨설팅 시행 및 교원 양성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 환경교육 선도대학 지정 연계 지원

- 교원 양성과정에 환경교육 반영 범위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환경교사의 환경교과 담당 확대 협의 및 지원

- 자격(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연수 등)을 갖춘 환경교사가 환경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현황 및 필요성

□ 지역환경교육계획과 학교환경교육계획의 연계 부족

-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계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시·도 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하여 연간계획을 별도 수립

*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가이드라인

- 지자체 및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필요

※ 시·도 지역환경교육계획에 학교환경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수 교육청은 연간 학교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의 연계가 미흡한 지역이 많음

□ 학교환경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 부재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나,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재

※ '18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예산은 약 79억원 수준으로 '16년 약 23억원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 필요

※ 교육청 내 환경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18년 기준 4개 교육청, 24명으로 '16년 1개 교육청, 1명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담인력이 부재한 곳이 더 많음

□ 지역 단위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원 시설 부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환경교육 거점 구축을 통해 교원,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전국 미활용 폐교는 400개 이상이며 지속 증가 전망, 폐교를 환경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민 87.8%가 찬성('17, 환경교육 추진체계 연구)

과제 추진 계획

□ 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이행 지원

- 시·도 교육청이 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지역환경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학교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 시·도 교육청이 연간 학교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환경교육계획의 학교 분야가 반영되도록 지원
 - ※ 환경부·교육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22)
- 환경부·교육부 공동으로 우수 시·도 교육청 기관 표창('22~)

□ 교육청의 기후·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 지원

- 시·도 교육청에 기후·환경교육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환경교육 전공자) 배치를 권장하고, 해당 교육청에 정책 사업 지원
-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전담자 지원 방안 마련
 - 환경부·교육부 공동 환경교육 담당자 대상 정기적 워크숍 개최

□ 시·도 단위별 학교환경교육 거점 구축

- 지역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학교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에코스쿨(eco-schools)*로 조성
 - * (실내) 생태, 기후변화 등 전시·체험 영역의 환경테마관, 교육·연수실, 아카이브 등 (실외)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자립시설, 생태놀이터, 생태공원 등 조성
 - 환경부, 해당 교육청 간 MOU 체결 및 사업 시행, 확대
 - ※ 추진일정 : 서울·부산 2개소에 시범사업 실시('21년), 효과성 검증 후 재정당국과 사업확대 협의('22~)
 - ※ 도서·연안지역 폐교를 해양환경분야 특화 공간으로 조성('21~, 해양수산부)

현황 및 필요성

□ 2019년 개정 유아 누리과정의 충실한 이행 지원 필요

- 2019 개정 유아 누리과정은 학습자의 경험과 실천의 대상과 범위를 생명과 자연까지로 확장
 - 교육과정에 강조된 환경감수성과 태도, 탐구, 비판적 사고, 참여와 실천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 필요
- ※ 2019 개정 유아 누리과정 목표 중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포함

□ 학사일정과 연계한 학생의 환경학습 선택 여건 부족

- 학교교육과정 내 여러 활동을 자율적 환경학습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방학, 방과후학교, 동아리, 수학여행 등 다양한 환경학습 지원
 - 취약지역 및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이동권 보장, 비용 지원 필요

□ 학교의 전체적 접근 및 관리에 대한 지원 부족

-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 평가를 토대로 학교 내의 주요 사업들과 연계를 유도하고 지원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
- 학교 구성원 전체가 변화를 만드는 학교 전체적 접근* 추진 필요
 - * 특정 학년의 개별 교과나 수업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환경을 주제로 교육하고 관리와 연계하는 접근
 - 친환경적인 학교 관리 강화가 필수
 - 학교마다 지속가능한 학교 풍토 구축과 함께 특색있는 환경교육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교사양성대학에서의 환경교육 실시 부족

- 학교환경교육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나,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해당 소양 및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 부족
 - * (교육대학) 초등교사 양성, (사범대학) 중등교사 양성
- ※ 교사양성대학의 전체 교과목 중 환경교과목 개설 비율: (유아) 2.19%, (초등) 1.13%, (중등) 1.43% ('19, 교원연수과정 지원자료 개발 연구)

□ 그린캠퍼스 사업의 환경교육적 고려 미흡

- '11년부터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그린캠퍼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
 - ※ ('19년 선정대학 주요사업) 에너지 사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고도화, 강의실 LED교체, 카쉐어링 사업 등
- 기존의 그린캠퍼스 사업에 교육 및 연구 활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지원 필요
 - ※ 국외 대학은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주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등 ‘캠퍼스 지속가능성 운동’으로 확장하는 추세

과제 추진 계획

□ 유아 누리과정의 충실한 이행 지원

-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현장에서 누리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2019 누리과정 해설 워크숍 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
 - 유아 누리과정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 및 공유
- ※ 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

□ 학사일정 연계 및 진로맞춤형 환경학습 지원

-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학생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환경동아리) 온-오프라인, 환경분야별 동아리 지원 확대('19, 120개소 → ~'25, 300개소)
 - (독서활동) 우수환경도서를 선정(2년 주기)하여 일선 학교 등에 홍보·배포(~'25, 200종)
 - (봉사활동) 사회봉사와 환경교육을 병행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25, 20개)
 - ※ 사회봉사활동 인증(VMS 등) 취득, 봉사활동과 환경교육 연계 강화
- 학교 수업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회 제공 및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환경학습 강화
 - 환경방학 프로젝트 사업 고도화 및 대상 확대(초·중학교)
 - 방과후학교(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 연계) 및 환경수학여행* 지원
 - * 교육부·교육청과 수학여행지 100선 공동선정, 국립공원·국립생태원·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환경교육 자원과 연계하여 수학여행 프로그램 지원
- 기후·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학습 제공과 관련 지원
 - 환경성 질환 발병률이 높은 13세 이하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아 및 교사 등에게 환경보건교육 지원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 '꿈꾸는 환경학교' 사업의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지원('22~)
 - * 환경교과 중심, 학생자율활동 중심, 범교과 학습주제 중심, 친환경시설 활용 중심, 마을혁신지구 사업 결합 등 유형화
 -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학교별 협력교사 위촉·구성 등 네트워크 지원
- 해양환경교육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25, 해양수산부)

□ 환경교육 선도대학 지정

- 대학 중 환경과목 개설, 부전공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
- ※ 교양필수과목 개설 등 전 학생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전담교수 확보 등 지속성을 갖춘 경우 지원 강화
- (단기) 교원양성대학(교육대, 사범대)에 환경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 지원
- (중장기) 일반대학 중 환경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 지원

□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동 개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환경교육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재설정 추진
- 그린캠퍼스 선정 기준에 환경교육 시행 및 연구활동 포함 등
- 그린캠퍼스 대학에서 환경·기후변화 관련 과목의 일정 학점 이상 시 인증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산
- * 예시)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십 프로그램
- 환경(교육) 동아리, 환경동아리 연합 또는 네트워크 사업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학교 교원을 위한 환경교육 연수 체계 미흡

- 현재 교원 대상 연수는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와 결합되어 산발적으로 추진 중
- 학교환경교육 질적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 연수과정을 설계하고 교원 연수 시스템에 반영 필요

□ 학교 교원 대상 환경교육 연수 기회 부족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환경교육 연수 부족
 - 타 교과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1급 정교사 자격용 연수를 실시하나, 환경교과는 1급 정교사 연수가 없음
 - ※ '19년 전국 시·도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총 5,136개의 연수과정 중 환경교육 관련 직무연수는 10개에 불과('19, 교원연수과정 지원자료 개발)
- 환경교육 관련 연수 참여자 대상 확대와 형식 다변화 필요
 -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유·초·중등 교원(어린이집 교원포함) 대상 연수 필요
 - 대학 총장 등 관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 관리자 연수 필요
 - 친환경 학교 관리 및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학교 시설의 친환경적 관리, 미세먼지 관련 보건교사들을 위한 연수 필요

□ 교사의 공동 학습기회 및 연구 촉진 필요

- 환경교육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고 타 교과와 연계를 추구하나, 교사들이 이를 구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부족

- 국가교육과정을 수업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환경교육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분야와 연계·통합을 위해 타 교과 교육 연구자들의 환경교육 연구를 촉진하고,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미래형 수업 개발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환경교육 교원 연수 체계 구축

- 유·초·중등 현직 학교 교사들이 환경소양 및 환경교육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 연수 종류별*로 교수요목, 단계, 이수단위 구성 등 연수체계 구성
 - * 유·초·중등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 원격연수 등
 - 교육청 환경교육 관련 연수 현황과 수요를 상시 조사하고, 교육청 연수 담당자와의 워크숍 개최
 -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담당 교사들이 환경수업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 및 참고자료」를 개발하여 제공(21)
- 학교 교사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 중심의 주제별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자료 및 관련 시스템 개발
 - ※ 국가환경교육포털과 지자체 운영 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등과 연계 추진
- 현직 교원 환경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대학원 전공 개설·운영 지원

□ 환경교육 교원연수 확대

- 유·초·중등학교 관리자 및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연수 확대
 - 유아·보육 교사 및 유치원장과 어린이집원장 등 관리자 연수
 - 학교관리자 대상 온·오프라인 환경교육 연수(자격연수에 포함)

- 초·중등학교 일반교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환경교육 과목 포함 추진 및 중·고등학교 환경 1급 정교사 연수 지원
- 학교 보건, 영양, 체육 교사 연수(미세먼지 등 환경보건 중심)
- 해양환경교육 교사 연수(원격연수 포함, 해양수산부)

○ 총장, 교수 등 대학 관리자 환경교육 연수

- 교육부와 협력 및 그린캠퍼스협의회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융합형 수업 장려와 미래형 환경수업 연구 지원

○ 초·중등 교사 중 환경 주제로 융합 수업을 구성·시행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 올해의 환경교사상, 환경교육 선도교사 위촉, 승진·이동 시 인센티브 등

○ 미래형 환경수업 연구 지원

- 유·초·중등학교(어린이집 포함) 교사 대상으로 새로운 내용, 교수법, 교육 자료 등을 적용한 미래형 환경수업 연구대회 운영 및 지원

※ 개별 또는 학습공동체 단위로 참가

- 교사 연수와 연계하여 연구 과정 및 결과 공유

3. 사회환경교육 강화

1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관리 부재

- 전국적으로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는 4,003개로 파악되나*, 이들에 대한 관리 기반은 부재

* 환경교육시설 현황조사 가이드라인 연구('19, 환경부)

- 사회환경교육 분야에서 환경교육 단체의 역할이 요구되나, 단체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환경교육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가 64%, 임의단체가 18%이며, 상근자 수 0~2명이 60%, 교육실 미보유가 60%를 차지('18, 환경교육 현황조사)

- 평생환경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체계 보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고도화 필요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수는 증가 추세이나, 체험형, 숲과 생태 주제, 유아와 초등 대상이 대부분으로 다양성 부족

※ 사회환경교육의 주제는 숲·생태 52.3%, 생활환경 15.4%, 기후변화 17.9%이며, 교육 대상은 유·초등 62.2%, 성인 18.8%('18, 환경교육 현황조사)

- 환경교육프로그램 형태와 주제, 대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활성화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및 지원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22~)
 -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주기적 현황 조사 및 관리, 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
-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제공 및 컨설팅* 지원('23)
 - * 법률, 예산, 행정, 조직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 컨설팅단 운영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양적·질적 제고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을 확대('25년까지 1,300개 지정)하여 제도 활성화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질적 개선방안 마련
 -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컨설팅, 연수, 시상 등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기존 인력관련 제도 및 사업 평가 미흡

- 현재까지 총 1,130여명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배출되었으나,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 지방(유역)환경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의 운영 개선 필요

□ 사회환경교육 분야에 청년들의 진입 확대 필요

- 사회환경교육의 장기적 발전 및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 기획자 및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
- ※ 젊은 인력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취득자 연령은 30대 이하가 28%, 50대 이상이 50% 차지('18, 환경교육현황조사)

□ 사회환경교육 분야 일자리 양과 질 부족

- 사회환경교육 영역은 강사, 해설사, 활동가 그룹과 프로그램 기획자 및 기관 운영자 등 일자리 구조가 단순함
- 환경교육 영역을 대상별, 주제별, 수준별 특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필요(평생학습 영역, 법정교육 영역, 자연치유 및 심리 영역, 상담 등)

□ 환경교육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필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환경교육 전문가 관련 제도 및 사업 개선

- '17년부터 본격 시행된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고도화 추진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사항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 자격취득자 대상 사후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의무화
 - 환경현안을 반영한 급별 표준교재 개발 및 1급 양성과정 도입
 - 해양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확대 및 자격제도 정규화(해양수산부)
-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환경교육지원단 사업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강사 역량 등 전반적인 발전 유도
 -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점검 및 강사 역량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고도화 및 강사 인력 정비
 -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와 연계한 국가 수준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으로 정비
 - ※ 추진일정 : 지도사 교재 개발, 지원단 프로그램·강사 역량 평가('21), 지도사 1급 양성과정 도입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22~)

□ 환경교육 직업훈련비 지원 및 인턴십 운영

-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등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양성기관에서 수강 시 직업훈련비(바우처) 지원
 - 전국에 위치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 과정(교육, 실습, 자격시험) 지원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후 전문경험 축적 및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인턴십 운영
 - 인턴을 채용하는 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기관에 인턴십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를 지원

□ 사회환경교육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환경교육 전공자의 일자리를 위하여 국·공립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 환경교육 전문인력 배치 강화 추진
 - 국·공립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 전문 인력(사회환경교육지도사 또는 환경교육 전공자) 의무배치 기준 및 근거 마련('21)
 - ※ 현행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요건에는 '상근 전문인력 2명 확보'가 있으나, 국·공립 환경교육 관련 기관에는 이에 대한 근거 부족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에 '전문인력 보유' 포함

□ 환경교육기관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분야별 사회적 경제기업 우수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23~)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 참여 대상 확대 필요

- 사회환경교육에 참여하는 직업군 및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교육 대상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한 사업은 부족함
 - ※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유·초·중등 대상이 74.9%, 성인 대상이 18.8%('18, 환경교육 현황조사)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수혜자를 고려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사회환경교육 참여 대상의 확대 필요

□ 배려와 정의에 기반한 환경교육 필요

- 미래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고, 양극화 및 개인화 현상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
- 환경 분야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정의를 고려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시민의 일상적, 자발적 환경학습 유도 필요

- 미래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교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보다 유연한 방식의 학습자 주도형 교육에 대한 흐름이 있음
- 친환경 태도를 갖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시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과 생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발적 환경학습의 활성화 필요
 - ※ 국민 74%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18, 환경인식조사)

과제 추진 계획

□ 사회환경교육 참여 대상 다양화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환경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오프라인 강좌 및 온라인 자료) 개발 및 보급
- 종교인, 언론인, 기업인, 주부, 고령자, 외국인 등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환경교육 참여자 다양화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 지원

- 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이에 환경 내용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기존 자원봉사센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와 연계하여 환경교육 활동이 자원봉사로 인정 받도록 지원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가 자원봉사 수요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홍보

□ 시민의 자발적 학습 확대 유도

-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 학습을 하는 무형식 환경학습 분야 사업 개발 및 운영
 -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지원 사업에 일반 시민들의 모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시민이 지역기반으로 자발적 환경학습 모임을 구성하여 연구, 모니터링 활동,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25, 60개 이상)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1 환경교육 유관기관 협업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정책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다각화 필요

- 관계부처의 환경교육 정책 소통기구로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있으나, 기능과 역할에서 부족함이 있음
 - ※ 제2기 환경교육진흥위원회('13~'16) 이후 4년만에 제3기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20)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 확대 필요

□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해

-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
- 부처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부 전체의 환경교육 관심도 제고 필요

□ 환경부 내 환경교육 사업 효율화 증대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의 다양한 환경교육사업을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필요
 - ※ 현재 실국, 소속·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한 소통, 사업연계 등은 부족

□ 지역 중심의 환경교육 협력체계 관리 및 지역형 사업 미흡

- 지역의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부재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 필요
-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을 위한 지역형 환경교육사업 발굴 및 지원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정책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강화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민관환경정책협의회(환경교육분과) 등 기존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연 1회, 환경교육진흥실무위원회 연 2회, 민관환경정책협의회(환경교육분과) 연 2회 운영 목표
- 지자체, 교육청,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환경교육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장 마련
 - ※ 지자체·교육청 담당자 정기 워크숍, 전문가·민간단체 포럼 개최 등

□ 범부처 환경교육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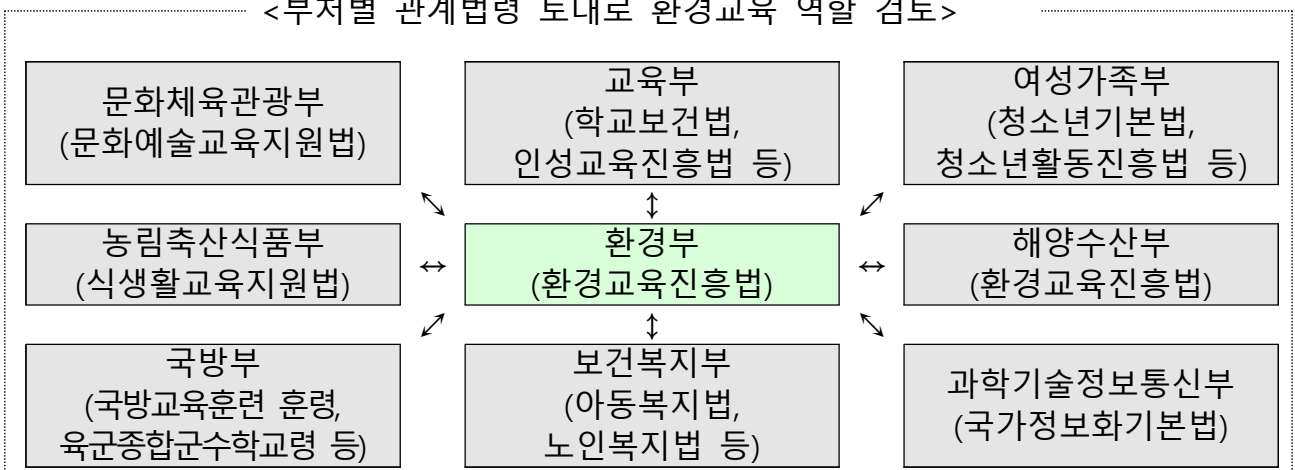
- 관계부처 환경교육 담당부서 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22~)
 -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담당부서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계획 공유 및 사업 연계 논의
 - ※ 교육부의 학교환경교육계획,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교육계획과 연계
- 부처별 교육사업과 연계한 융복합형 환경교육 협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추진('21~)
 -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연계한 탄소중립 구현 지원(관련 자문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환경교육 우수학교 사업과 연계 등)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환경교육도시, 해양환경교육 시범학교, 해양환경교육 교사연수, 해양환경교육지도사 등과 연계

※ 부처 간 공동 협업과제(안)

부처	주요정책	공동협업과제(안)
교육부	진로교육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과 협업하여 환경분야 온라인 진로멘토링 정례화 -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에서 여러유형(현장직업체험형, 진로캠프, 학과체험 등)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 'K-MOOC'와 연계하여 환경학습 강좌 개설 운영
	민주시민교육	- 범교과 학습주제인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 ※ 지자체 민주시민교육센터와 협업사업 발굴
	인성교육	- 예비교원 인성교육용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사업 내 환경교육 강좌 지원
	독서진흥	- 환경도서 전자출판 지원사업 협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내 환경교육 강좌 지원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교육	- 유치중고등학생 및 성인 대상 식생활교육과 접목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쌀을 활용한 자연식품 체험, 기후변화와 로컬푸드, 음식물 쓰레기 절감 조리법 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과 해양환경 온라인 플랫폼 연계 - 환경교육행사(환경교육한마당 등)에 해양환경분야 참여 확대

○ 부처별 특성, 정책기능 및 역할에 따른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부처별 관계법령 토대로 환경교육 역할 검토>



※ 추진일정 : '25년까지 범부처 사업 15개 발굴·추진

□ 환경부 내 환경교육 총괄 조정·관리 체계 구축

- 환경부 실·국,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환경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총괄 조정·관리
 - 환경교육 정책 및 사업계획 공유, 협업사업 발굴, 사업 모니터링, 성과 관리 등 사업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
 - ※ 기후변화교육(신기후체제대응팀), 생태교육(자연공원과), 환경보건교육(환경보건정책과), 교원연수 및 공무원 환경교육(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 환경부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의 환경교육 자원(사업·시설·인력) DB 구축
- SDGs와 연계한 환경부 내 환경교육사업 지침 개발·보급(22)

□ 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 및 지역사업 지원

- 광역단위 지역별로 환경교육 관련 주요 주체들이 환경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독려
 -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방(유역)환경청, 광역지자체,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환경부-교육청이 연계하여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건 제안(연 1회 제안 추진)
 -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관·교원 네트워크 및 환경교육정책연구단 운영 지원
- 지역형 환경교육 사업 지원
 - 기초환경교육센터 중심으로 마을결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마을리더 양성, 지역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학교-사회 환경학습 협력사업 확대 필요

- 학교-사회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이 학교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으나,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이 연계성을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학교-사회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환경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필요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환경교육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기후변화, 생태계파괴 등 환경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사회문제와 사회공헌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타 분야의 시설 및 단체와의 연계 시도 부족

- 환경교육의 융합적 특성을 활용하여 타 분야 시설의 사업에 환경교육이 접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연계 시도 부족
-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경교육 확대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학교-사회 학습공동체 지원 및 협력모델 개발

- 학교-사회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 학교 교사와 지역 민간단체 담당자가 함께 환경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습하도록 지원
 - 학교-사회 담당자 간 환경교육 연구회 구성·운영을 통한 수업안 개발 및 협력 환경교육 운영 지원

- 다양한 지역 관련 주제를 SDGs로 통합하고 이를 학교-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환경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전통생태지식 활용, 생태관광과 지역사회, 지역현안 해결 등

□ 기업과의 환경교육 협업 확대

- 사회공헌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환경교육과 연계되도록 지원
 - 환경교육기관과 일대일 매칭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교육 컨설팅 실시 및 사회공헌활동(CSR) 확산을 위한 협업 추진

□ 타 분야 시설 및 단체와 연계 강화

- 교육 기능을 가진 기존 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고유 목적과 접목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도서관) 독서교육 연계, (과학관) 과학교육 연계, (박물관) 역사교육 연계, (문화센터) 예술교육 연계 등
-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환경분야 외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 및 융합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확대 미흡

- '00년 이후 매년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를 통해 연구와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지 못함

※ 3국의 협력이 소수의 연구자 및 관계자로 제한적이며, 3국 공동프로젝트 성과물의 보급 및 활용 저조

- 기존 협력 집단 뿐 아니라 지역별, 분야별, 대상별로 3국의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필요

□ 국가의 위상에 맞는 국제 협력체계 강화 필요

- 환경협력국 대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자원을 교류하는 장 마련 필요

□ 국제기구 연계 소홀 및 민간 네트워크 발굴 필요

-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등이 있으나, 환경교육과의 연계 노력 부족
- 국내외 우수한 환경교육 인적, 물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필요

-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 체계적 이행 지원조직 마련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영역 확장

-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의 주도적 추진 및 연구 성과 국내 공유 강화

- 한·중·일 환경교육의 영역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 한·중·일 영역별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TEEN연례회의와 연계하여 발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영역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지자체 공무원, 학교 교사, 민간단체 기획자, 주제(양서류, 조류, 생태관광, 해양 환경 등) 영역에 따라 한·중·일 네트워크 확대
 - ※ 추진일정 : 5개 분야 네트워크 추진('25)

□ 국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 환경협력국(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과정 운영 등을 통해 국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 국제기구 협력 강화 및 분야별 국제 네트워크 확대

-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요 원칙, 헌장, 의제에 부합하는 환경교육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성
 -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등 개도국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 등 국제협력 기구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운영(해양수산부)
- 민간단체, 대학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국제 환경교육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국제 심포지엄 참여 및 해외 연수기회 제공 등으로 국제협력 역량 강화
 - 해외 환경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등 국내외 환경교육 상호 교류 활성화

VI

재원 조달방안 및 추진 주체

1. 재원 조달방안
2. 추진 주체

VI. 자원 조달방안 및 추진 주체

1. 자원 조달방안

□ 기본 방향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원 마련
- 기관 간 상호협업·조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재정 조달방안

- 주체간 협력 확대로 소요재정 분담
 - 범부처, 지자체 간 환경교육 정책 연계성 강화로 재정 분담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민간단체 사회환경교육 활동 등과 연계하여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재정 확보 추진

□ 제3차 종합계획 예산소요(추정)*

(단위: 백만원)

정책영역	총예산	'21	'22	'23	'24	'25
1. 환경교육 기반	24,473	3,335	6,531	4,975	4,666	4,966
2. 학교환경교육	44,324	8,342	8,692	8,930	9,280	9,080
3. 사회환경교육	26,645	5,215	5,215	5,405	5,405	5,405
4. 환경교육 협력	29,564	7,780	5,197	5,397	5,530	5,660
총계	125,006	24,672	25,635	24,707	24,881	25,111

* 종합계획에 포함된 환경부 환경교육 사업 예산(실·국, 산하·소속기관)을 종합

※ 투자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협의

2. 추진 주체

영역별 추진 과제		추진 주체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1	<input type="checkbox"/> 국가 환경교육 지원기관 기능 강화	환경부, 해수부, 국가센터 등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 도입	환경부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자원 확보 및 집행 효율성 제고	환경부, 기재부
	<input type="checkbox"/> 환경학습계좌제 도입·운영	환경부, 국가센터,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2	<input type="checkbox"/>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및 기능 체계화	환경부, 해수부, 지자체, 국가센터, 지역센터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 연계 강화	환경부, 해수부, 국가센터, 지역센터
	<input type="checkbox"/> 지역환경교육계획 평가·환류 시행	환경부,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도시 지정 확대	환경부, 해수부, 지자체
3	<input type="checkbox"/>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부, 해수부, 국가센터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통계 관리	환경부, 교육부, 해수부, 국가센터, 지자체, 교육청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백서 발간	환경부, 해수부
4	<input type="checkbox"/> 범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환경부
	<input type="checkbox"/> 기후변화 특화 프로그램 강화	환경부
	<input type="checkbox"/> 기후변화교육 집중 지원	환경부
5	<input type="checkbox"/> 미래형 디지털 환경학습 교재·교구 개발	환경부, 국가센터
	<input type="checkbox"/> 생애주기 맞춤 환경교육 프로그램 마련	환경부, 국가센터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1	<input type="checkbox"/> 초·중등 국가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 반영 요청	환경부, 교육부
	<input type="checkbox"/> 초·중등 SDGs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환경부, 교육부, 국가센터
	<input type="checkbox"/>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반영 권고	환경부, 교육부, 대학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사의 환경교과 담당 확대 협의 및 지원	환경부, 교육부, 교육청
2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계획 수립·이행 지원	환경부, 교육부, 해수부, 교육청, 국가센터, 광역센터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기후·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 지원	환경부, 교육부, 교육청
	<input type="checkbox"/> 시·도 단위별 학교환경교육 거점 구축	환경부, 해수부, 교육청

영역별 추진 과제	추진 주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유아 누리과정의 충실 이행 지원 <input type="checkbox"/> 학사일정 연계 및 진로맞춤형 환경학습 지원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선도대학 지정 <input type="checkbox"/>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동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교육청, 국가센터 환경부, 교육부, 교육청, 국가센터 환경부, 해수부, 교육청, 학교, 국가센터 환경부, 교육부, 대학 환경부, 대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교원 연수 추진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교원연수 확대 <input type="checkbox"/> 융합형 수업 장려와 미래형 환경수업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대학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해수부, 교육청, 국가센터, 지역센터 환경부,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국가센터
3. 사회환경교육 강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및 지원 <input type="checkbox"/>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양적·질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해수부, 국가센터, 지자체, 민간단체 환경부, 국가센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전문가 관련 제도 및 사업 개선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 직업훈련비 지원 및 인턴십 운영 <input type="checkbox"/> 사회환경교육 양질의 일자리 확대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기관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해수부, 국가센터, 지방(유역)환경청 환경부, 국가센터, 양성기관, 민간단체 환경부, 해수부, 국가센터, 지역센터, 민간단체 환경부, 기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회환경교육 참여 대상 다양화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환경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시민의 자발적 학습 확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기업 환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가센터, 지역센터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책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강화 <input type="checkbox"/> 범부처 환경교육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 <input type="checkbox"/> 환경부 내 환경교육 총괄 조정·관리 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 및 지역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관계부처, 전문가, 민간단체 환경부, 관계부처(교육부, 해수부 등) 환경부 환경부, 지자체, 지역센터, 교육청, 민간단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학교-사회 학습공동체 지원 및 협력모델 개발 <input type="checkbox"/> 기업과의 환경교육 협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타 분야 시설 및 단체와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지자체, 국가센터, 지역센터, 교육청, 민간단체 환경부, 국가센터, 기업 환경부, 유관기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영역 확장 <input type="checkbox"/> 국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input type="checkbox"/> 국제기구 협력 강화 및 분야별 국제 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환경부, 대학 환경부, 국제기구, 해수부, 민간단체, 대학